

## [ 종합·해설 ]

■ 현장과 시각 ■

F1특별법 표류 누구 탓?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전남의 속원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안(F1특별법)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F1특별법안은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노린 정치권의 다툼에 휘말려 첫 관문인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주저 앉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결기를 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 노력 앞에 정쟁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러나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도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처가 현명했느냐"고 묻고 있다. 정치권 탓만 할 게 아니라 지역의 노력에 무엇이 미친었는지 각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던 중 지역의원들이 전남도의 국회 접근 스타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국회의원들은 전남도의 열정은 높이 살만하나 '여의도 방식'을 제대로 째뚫고 못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전남도의 '정의전'이 세련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전남도는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의 한 고위 간부는 회기 후 "F1특별법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 다툼 때문이었지만, 한 풀 벗겨보면 이를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과 연계 하려는 영남권 의원들이 긴질기게 물고 늘어진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지역의원들의 '근심'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번 F1특별법 무산은 우리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에 광주·전남에서는 당시 큰 사업을 만들어오지 못하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당시 대구에서는 섬유산업 부흥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제 광주·전남도 빅 플랜을 만들어내는 수준은 상당하다. 외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건설, 전남의 J프로젝트와 서남권 발전 종합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F1특별법 무산에서 보듯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이나 예산 확보 능력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전남도가 F1특별법 처리에 고민하는 사이 전북도의 새만금특별법은 같은 회기에 농림해양수산 위에서 원안가결돼 최종 입법의 직전 단계인 법사위로 넘어갔다. 전북 지역 정치인과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부처, 정치권과 어떻게 '겨뤄왔는지' 벤치마킹이라도 해볼 일이다.

/unipark@kwangju.co.kr

## 지역 편중 없이 다양...호남출신 장관 4명

호남인맥  
대체부

## &lt;12&gt;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면서 보건사회부로 출발했다. 1963년, 노동 관련 업무가 노동청으로, 1980년에는 환경 관련 업무가 환경청으로 승격·독립한 이후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출범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국립방향의 동산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외교부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핵심 권력부처가 아니라 점에서 역대 장·차관의 지역적 편차가 크지 않은 다양한 인맥 구조를 보였다. 우선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의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부 장관 15명의 출신 지역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호남 인맥은 전남 출신의 김정례, 김양배 장관을 비롯해 전북 출신의 김종인

장관 등 3명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서상복씨와 이성호씨는 각각 두 차례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지냈다.

같은 기간 임명된 차관 12명의 출신

주와 전남 출신의 이기호, 최수병씨 등 2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강원, 북한 출신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인맥 구조는 국민의 정부에도 이어졌다. 7명의 장관 가운데 영남 출신 2명(주양자, 차홍봉), 서울 출신 2명(김도임, 김원길), 강원 1명(최선정), 충청 1명(이태복) 등으로 나타났다. 호남 인맥으로는 전남 출신의 김성

호 장관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임명된 차관 5명의 출신 지역은 충청 2명, 강원 1명, 경기 1명, 북한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 4명의 출신 지역은 영남 2명(유시민, 변재진), 경기 1명(김근태), 충청 1명(김화중)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경남 밀양 출신인 변재진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이끌고 있다.

차관 4명의 출신자는 영남 2명, 충청 1명, 전남 1명(강운구)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총 6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이상용 사회복 지역책본부장을 필두로 이상영 장애인정책관, 최희주 보건정책관, 박찬형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팀장급에서도 호남 출신이 상당 부분 포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 고위급 19명 중 6명...팀장급 상당 포진

보건복지부는 핵심 권력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대 장·차관의 지역적 편차가 크지 않은 다양한 인맥 구조를 보였다. 우선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의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부 장관 15명의 출신 지역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호남 인맥은 전남 출신의 김정례, 김

양배 장관을 비롯해 전북 출신의 김종인

장관 등 3명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서상복씨와 이성호씨는 각각 두 차례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지냈다.

같은 기간 임명된 차관 12명의 출신

주와 전남 출신의 이기호, 최수병씨 등 2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강원, 북한 출신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인맥 구조는 국민의 정부에도 이어졌다. 7명의 장관 가운데 영남 출신 2명(주양자, 차홍봉), 서울 출신 2명(김도임, 김원길), 강원 1명(최선정), 충청 1명(이태복) 등으로 나타났다. 호남 인맥으로는 전남 출신의 김성

## '태평양전 희생자 지원법' 거부권 검토

정부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정부 제출안과 조간운 의원 발의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일제강점기 국가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본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장복심 의원 등이 수정 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행자위 관계자는 "행자위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넘겼으나 본회의에

서 수정안이 발의됐고, 예상과는 달리 이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위원회안은 표결도 끝 못하고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태평양 전후 국외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게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당초 생존자에게는 '연 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

정부는 생존자에게 일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6·25 참전용사 등 다른 과거사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생존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세정부당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 경공업 원자재 가격 합의...이달말부터 제공

남북은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 가격에 합의,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을 주고받는 남북 간 협력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남북은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간 제2차 실무협의'를 열고 남측이 올해 제공하기로 한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로 품목별 가격 등을 명시한 세부합

의서를 7일 체택했다.

경공업 원자재는 의복류(2천700만 달러)와 신발류(4천200만 달러), 비누(1천100만 달러) 등이며, 이번 협의에서 총 94개 품목 중 62개(섬유 34개, 신발 21개, 비누 7개) 품목의 가격과 수량에 합의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32개(섬유 4개, 신발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004년 10월 12일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 파병된 이원 3만 6천710명, 회률 3천117t을 공수한 공군 다이만 부대가 8일로 파병 1천일을 맞아 부대원들이 무사하고 임무수행을 다짐하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8군사령부 한반도에 남는다”

주한 미 8군사령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잔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사정에 정통한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그동안 잔류 또는 미국 철수 여부를 놓고 관심이 많았던 주한 미 8군사령부가 그대로 한반도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안

KORCOM·가칭) 예하로 편제된 육군사령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육군 전투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에 있는 19전구(戰區)지

원사령부가 8군사령부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2012년 4월 이전에 현재의 행정사령부 기능에서 전구급 전투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

8군사령부)에 남는다"면서 "8군사령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8군사령부 산하 미 2사단이 2005년 미 대형 운송사단(UEx)으로 개편을 완료한 이후 8군사령부를 둘러싸고 해체설 또는 이동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식통은 "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될 '미 한국사령부'(US